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5. 6. 22.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금융지주의 현황 및 평가	1
I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5
1. 겸업 활성화	7
2. 정보 공유 및 활용 촉진	12
3. 해외시장 진출 확대	14
4.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17
III. 향후 계획	19
참고 : 직원 겸직금지 업무 개선안	20

I. 금융지주의 현황 및 평가

1 금융지주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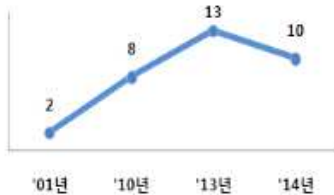
□ '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 금융지주제도는 겸업화와 대형화를 지원하고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

□ (성과) 지난 15년간 금융지주 중심의 그룹화를 통해 겸업화와 대형화가 촉진되고 그룹단위 건전성 관리도 가능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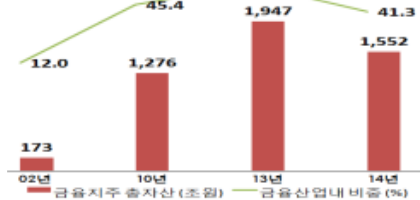
① 금융지주의 자산규모가 국내 금융산업의 40%를 상회하는 등 금융지주 중심으로 겸업화와 대형화가 이루어짐

* 금융지주 총자산(금융산업 내 비중): ('02) 173조원(12%) → ('14) 1,552조원(41.3%)

< 금융지주회사 수 >



< 금융지주 총자산 및 금융산업 내 비중 >



② 그룹단위 연결감독, 통합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진일보

< 은행지주 고정이하여신 비율(%) >



< 은행지주 총자본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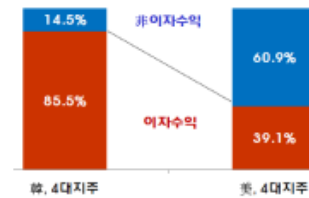
* 비은행 지주도 필요자본비율이 200% 내외로 최소기준 100%를 충분히 상회

□ (한계) 그간 양적 성장과 양호한 건전성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룹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숙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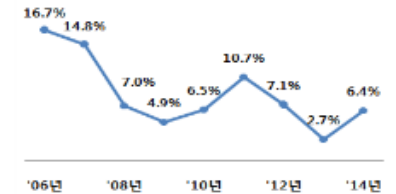
①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하는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은 글로벌 금융그룹과는 큰 차이

- 국내 시장 성숙,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순이자마진 하락으로 수익성 저하 추세 (ROE '11년 10.7% → '14년 6.4%)

< 4대 지주 이자수익 의존도('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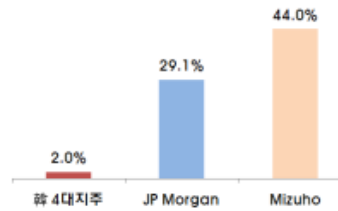
< 금융지주 평균 ROE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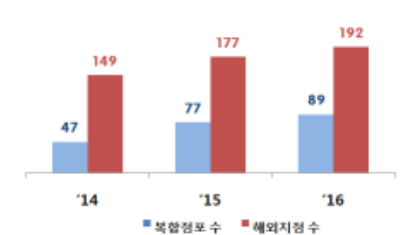
② 최근 복합점포 확대 등異種 자회사간 겸업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필요

-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그룹과의 격차가 큰 상태

< 4대 지주 해외 영업자산 비중('14) >



< 복합점포, 해외지점 확대계획 >



➡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신시장·신사업 진출 확대 등을 통해 금융지주그룹의 경쟁력 제고 및 질적 성숙을 지원할 필요

- ◇ 현장간담회(6.2) 등을 통해 ①점업 시너지 창출, ②정보공유, ③해외진출, ④신사업·투자 확대 등 다양한 의견 제기

① 위탁, 점직 등 칸막이 규제로 복합사업 추진 등 시너지 창출 곤란

- 업무위탁 규제가 非지주 금융회사보다도 까다로워 그룹내 자회사간 복합서비스 추진이 어려움
- 점직금지도 이해상충 방지 목적 이상으로 엄격하여 그룹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 활용하기 어려움

< 현장의 목소리 >

- ① 까다로운 위탁제한으로 동일 그룹 내 Two Bank 간 교차 서비스 제공 불가능
☞ 두 개 은행 지점망을 자유로이 활용하여 입금지급, 잔액증명서 발급, 통장 재발행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희망
- ② 점직금지로 인력풀이 희소한 신용위험평가·분석인력의 효율적 활용 곤란
☞ 은행의 신용위험평가·분석인력을 지주내 여타 자회사(캐피탈·저축은행)를 포함한 그룹 차원에서 활용 희망

② '14년 정보공유 관련 규제 강화로 그룹내 정보공유가 크게 위축

- 영업목적 정보공유가 금지되어 고객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합상품·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그룹내 시너지 창출 제약
- 그룹 내 정보제공에 대한 엄격한 절차, 정보제공 내역의 고객통지 의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등으로 정보공유 기피

< 현장의 목소리 >

- ① 내부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만 허용하고 영업목적 정보공유를 금지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영업목적 정보공유를 허용할 필요
- ② 그룹내 정보제공 내역의 고객 통지방법을 문서, 이메일만 허용
☞ 이메일 보유율이 고객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문서 통지시 막대한 비용(4대지주 450억원 추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통지방법을 허용

③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가 까다로워 진출 확대에 제약

- 금융지주사가 해외법인에 대해 직접 자금지원만 가능하고 보증은 불가능하여 자금조달 비용 증가
- 그룹 계열사가 해외법인에 자금지원시 담보확보 의무가 엄격하여 자금지원에 애로

< 현장의 목소리 >

- ① 지주사가 해외법인에 대해 대출, 채권인수 등 직접 자금지원만 가능
☞ 자금조달비용, 환위험 노출 필요가 없는 보증도 허용할 필요
- ② 그룹 계열사가 해외법인에 자금지원시 신용공여액 이상의 담보확보 의무
* 지분을 80% 이상: 담보 면제, 80% 미만: 2년까지만 담보확보 유예
☞ 담보 면제기준(80%)을 완화하거나 유예기간(2년)을 연장해 줄 것을 희망

④ 신사업 진출, 투자 관련 걸림돌 규제로 적극적 추진 곤란

- 금융지주는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회사'만 투자할 수 있어 핀테크 등 융합업종 투자시 해당여부가 불명확
- PEF, 회사형 공모펀드 등은 투자기구에 불과함에도 일반 자회사등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관련 영업에 제약

< 현장의 목소리 >

- ① 금융지주는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회사'만 투자 가능
☞ 핀테크 등 융합업종 투자와 관련하여 유권 해석 또는 법령 개정 필요
- ② 손자회사인 자산운용사는 PEF 설립이 불가능
*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해야 하나, PEF는 LP지분이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 소유가 불가능
☞ PEF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손자회사의 PEF 설립을 허용
- ③ 회사형 공모펀드에 자회사 지분보유 규제(상장 30%, 비상장 50%) 적용
☞ 잦은 청약·환매로 지분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외 인정

I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기본 방 향 >

- ◆ 금융지주가 ①그룹 전략 수립, ②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③통합 리스크 관리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

1. 업무위탁과 겸직을 통한 겸업 시너지 창출

- 이해상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업권별 칸막이 규제 제거** → 고객에게 “One-stop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

2. 그룹내 정보공유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화**하고 그룹 내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다만, 업계 개선건의가 많은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금지 규제는 금융회사가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대국민 신뢰구축이 선행된 뒤 발전적 대안 논의

3.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글로벌 경영전략 지원

-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임직원 겸직 등을 용이하게 하여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14말 은행 순이자마진(%) : 한국 1.79, 미국 3.12, 베트남 3.18, 인니 3.73

4.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 확대 지원

- 핀테크, 대체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화

☞ 금번 개선방안을 통해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하되,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금융개혁 자문단,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검토

< 추진과제와 향후목표 >



(1)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

□ (문제점) 영업 관련 업무위탁을 엄격하게 금지하여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통한 연계영업**이 어려운 상황

< 연계영업이 어려운 사례 >

① 은행 창구를 통한 계열사 상품 판매위탁 곤란

- 계열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채널이 가장 넓은 은행에 판매위탁**할 수 있어야 하나 판매계약 체결 위탁이 불가
-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저축은행·캐피탈사와 연계 대출**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출계약 서류접수 위탁 필요***

* 현재는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캐피탈사의 대출상품 안내에 그치고 있음

② Two Bank 간에 입금·지급, 증명서 발급서비스 불가

- 그룹내 Two Bank간 **입금·지급,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등 단순업무를 상호위탁할 수 없어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불가

⇒ 일부 업무는 **非지주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위탁가능한 업무***에 해당되어 지주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

* 대출계약 서류접수: 非지주는 모집인 등에 위탁 가능, 지주는 위탁 금지
입금·지급: 非지주는 우체국 등에 위탁 가능, 지주는 위탁 금지

□ (개선) 계열사간 업무위탁 규제의 대폭 완화로 연계영업 지원

① 심사·승인을 제외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을 허용

* 다만,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45)에 따른 위탁규제를 준용

②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 허용

③ 아울러,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을 허용하여 그룹내 효율성 제고

* 지주 소속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기업대출시 은행의 전문화된 신용위험 분석역량을 활용할 수 없는 애로 해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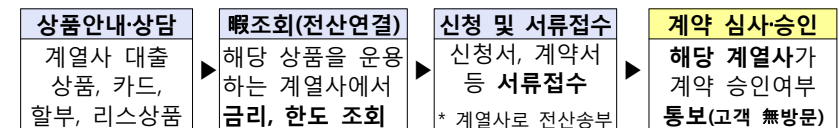
□ (기대효과) 은행의 **지점망***과 인력을 그룹의 **종합판매채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계열사간 연계영업 활성화**

* 금융지주그룹 소속 은행의 전국 지점망 약 4천개

①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사에 대한 **연계대출서비스 제공** 가능

- 고객은 **대출상품 탐색비용**과 **대출사기에 노출될 위험** 경감

<은행 지점에서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절차>



② 은행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 대출,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업무 등은 **은행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One-stop 서비스 가능

* 은행·증권 영업점이 공동점포에서 종합 서비스 제공('14.11월 규제완화)

③ 그룹내 **Two Bank**의 지점망을 공동활용하여 **교차서비스** 가능

* (예) 부산·경남은행 / 광주·전북은행 → 입금·지급, 통장재발행, 환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대출계약·카드·할부·리스 계약 체결(심사승인 제외) 등

⇒ (조치사항) 금융지주법 시행령(이하 승) §26, 별표 6 개정

(2) 자회사등간 직원겸직 허용범위 확대

- (문제점)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간 직원겸직을 엄격히 제한하여 그룹 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어려움

<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어려운 사례 >

- ① 이해상충과 무관한 후선업무, 비핵심 업무*까지 겸직 금지

* 대출계약, 채무보증계약, 할부·리스계약 체결 등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 ② 기업신용분석, 위험관리 등의 전문인력이 은행에 집중*되어 있으나 겸직 금지로 계열사가 활용 불가

* 시중은행은 100명 내외의 신용평가 인력이 있지만 계열사는 10여명 이하

- (개선)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겸직규제 합리화

- 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 (☞ 28개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겸직 허용)

- 심사·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판매업무의 겸직 허용

→ 은행 창구직원이 겸직(또는 업무위탁)을 통해 윈스톱 처리 가능

- ②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의 겸직 허용

- 단,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는 그룹의 통합관리를 위해 지주사 겸직 상태에서 여러 자회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만 허용

* 자회사 상호간 겸직을 허용할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 (기대효과) 금융지주는 연계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겸직 또는 업무위탁을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

⇒ (조치사항) 승 §26, 별표 6 및 규정 §13-15, 별표 1-4 개정

(3) 미등기 임원 겸직허용 범위 확대

- (문제점) 미등기임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

- 등기임원은 겸직이 폭넓게 허용되어 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간 겸직, 보험 및 금융투자 관련 경영·부수업무 겸직이 가능하나, 미등기임원은 불가능

- (개선) 미등기 임원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폭 넓은 겸직허용

⇒ (조치사항) 승 §18 개정

(4) 업무위탁 및 겸직 절차 간소화

- (문제점) 영업지원 관련 업무위탁 및 지주-자회사등간 직원 겸직시 대부분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에 최대 30일 소요

- 특히, 지주-자회사등간 직원 겸직이 빈번(금융지주 인력의 35%)한데 매번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담

- (개선) 영업지원 관련 업무위탁 및 지주-자회사등간 직원 겸직시 사전보고(7일전)로 변경하여 업무처리 및 인사운영상 부담 경감

- (업무위탁) '대출, 채무보증, 할부·리스 등' 각종 계약체결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채권추심, 신용위험 분석·평가 등 영업지원 관련 업무위탁을 보고로 변경

- (겸직) 모든 지주-자회사등간 겸직을 보고로 변경

⇒ (조치사항) 승 §18 개정

<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제도 현황 및 개선안 >

1 현행

- **임원:** 등기임원은 대부분 겸직이 허용*되는 반면, 미등기임원은 대부분 겸직 금지(직원과 동일한 규제 적용)

* 단, 은행, 보험, 금융투자 권역간 겸직은 경영·부수업무로 한정

- **직원:** 대부분 겸직 금지

- ① 51개 업무 겸직 금지(후선업무, 비핵심업무 다수 포함)
- ② 신용위험분석 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 겸직 금지

※ 다만, 복합사업 운영을 위하여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겸직은 허용('14.11월 규제완화)

* 복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및 보상, 인사관리 담당 등

2 개선

- **임원:** 미등기임원도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 허용
- **직원:** 겸직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
 - ① 28개 핵심업무만 겸직 금지(후선업무, 비핵심업무 겸직 허용)
 - ② 신용위험분석·평가업무: 겸직 허용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 겸직 허용(단, 지주겸직 필요)

구분		현행	개선
임원	등기	대부분 겸직허용	대부분 겸직허용
	미등기	59개 중 51개 금융업무 겸직금지	대부분 겸직허용
영업담당 직원		59개 중 51개 금융업무 겸직금지	28개 핵심업무만 겸직금지
신용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담당 직원		겸직금지	겸직 허용

2

정보 공유 및 활용 촉진

(5)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합리화

- (문제점)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시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여 그룹내 정보공유 급감('13년 34억건→'14년 12억건, 63% 감소)

<고객정보 공유시 주요절차('14.11.29 시행)>



- 그룹내 이용실적 등에 따른 고객우대서비스* 축소 우려마저 제기

* 예시: 계열 은행증권카드 거래실적을 합산한 등급에 따른 금리, 수수료 할인 등 (그룹사간 고객 거래실적 공유 축소 → 우대등급 하락 → 고객 부담 증가 가능)

- (개선) 과도하게 복잡한 정보제공 절차를 합리화

* 고객정보 암호화, 이용 후 즉시폐기, 목적 범위내 활용 등 필요한 규제는 유지

- ① 1개월 이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

* 신용평가를 위한 정기적 고객정보 최신화 작업 등 정보공유 건의 약 1/4에 해당

** (예) BIS 지표 산출·보고, 대주주와 거래 보고의무(법령), 준법감시인의 내부 통제실태 조사 및 감사위 보고(감독규정), Risk 집중 위험점검 등

- ② 이용기간 적정성의 매월 점검의무는 매분기 정보관리 점검시 통합 운영

- (기대효과) 필요한 정보가 그룹 내에서 적시에 원활히 유통되어 위험관리 및 금융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 가능

⇒ (조치사항) 규정 §24-2 개정

(6)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

- (문제점) 정보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年 1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함에 따라 오발송, 막대한 비용발생 등 우려

* 이메일 보유고객 20~25%, 연 1회 문서통지 시 비용 460억(4대 지주 추산)

- (개선) 통지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 ① 우편,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추가
- ② 既 통보한 정보제공 내역의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고객정보 제공인 경우 최초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 면제

- (기대효과) 오발송에 따른 정보유출 우려를 줄이고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게 하여 고객의 편의성 제고

⇒ (조치사항) 승 §27-2 개정

(7) 빅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촉진

- (문제점) 지주사가 그룹내 빅 데이터를 집중하여 통합 위험관리 및 계열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

- (개선) 지주사가 그룹내 빅 데이터의 집중 관리를 통해 위험관리 및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

- ① 자회사등에 대한 위험관리, 영업지원 목적의 그룹 신용정보 집중관리, 활용, 제공 업무 추가
- ②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업무 추가

- (기대효과) 지주사가 그룹내 빅 데이터 종합분석센터로 기능하게 되어 통합 위험관리 및 상품개발역량 강화

⇒ (조치사항) 승 §11 개정

※ (‘15.6.3,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식별성없는 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로 보지 않아(규제대상 아님) 지주그룹의 빅 데이터 활용을 촉진 시킬 것으로 기대

3

해외시장 진출 확대

(8) 자회사등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

- (문제점) 그룹 내 자회사등이 계열 해외법인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할 때 담보(대출액의 100% 이상)를 확보*해야 하는데,

* 지분을 80% 이상 또는 해외진출 2년 이하 신설법인에 한해 담보 면제

- 담보력이 부족한 신설 해외법인의 경우 계열사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어 조기 정작에 애로

< 담보확보 관련 애로 사례 >

- ① 신흥국의 외국인 투자제한*(20~60%)으로 담보면제가 가능한 80% 지분 확보가 어려움

* 은행 지분제한 : 인니 40%, 필리핀 40%, 베트남 30%, 말련 30%

- ② 해외법인이 유예기간인 2년내 독자적 영업기반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2년내 대출 상환 또는 담보 확보 곤란

- (개선) 그룹 내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에게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

- 다만, 위험관리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현행 유지

* 개별한도: 신용공여하는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 20%

- (기대효과)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열사의 적극적 자금지원이 가능하여 신설 해외법인의 조기 영업기반 확보를 촉진

- 권역별(중화권, 동남아권 등) 거점 해외법인이 현지통화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권역별 시너지 창출도 가능

⇒ (조치사항) 규정 §22 개정

(9)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

- (문제점) 지주사가 해외법인에 자금지원(대출)만 가능하고 **보증은 허용되지 않아** 외화채권 발행, 외화자금 운용 등 **비용 증가**

* (事例)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 그룹은 베트남 SG Finance사 설립 후 본사 보증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현지통화로 자금을 쉽게 조달

- (개선)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 허용

*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

- 다만, 보증의 경우, **납발 시 부실전**이 우려가 있어 한도를 설정 (개별한도: 금융지주사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 20%)

- (기대효과) 지주 보증으로 해외법인이 현지통화 조달 가능

⇒ (조치사항) 승 §11 개정

(10)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폐지

- (문제점) 국내·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최대 30일)이 필요

- 대부분 국가*에서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적격성 심사(Fit & proper test)를 실시하고 있어 **2중심사** 부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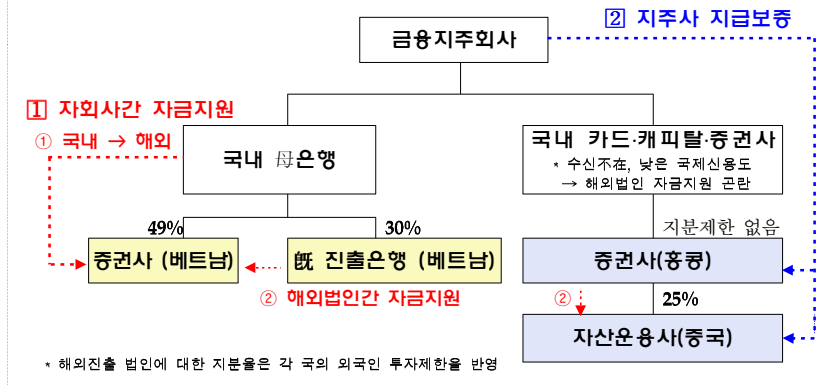
*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중국 등

- (개선) 사전승인을 면제하여 현지 감독당국 심사로 일원화

⇒ (조치사항) 승 §18 개정

< 해외법인 자금지원 관련 제도개선의 효과 >

◇ 금융지주그룹 해외법인 자금지원 경로(例示)



자금지원 주체	현행	개선
① 자회사등간 자금지원 (국내 → 해외, 해외법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공여하는 계열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80%이상 지분보유 또는 (ii) 해외진출 2년내 신설 법인만 무담보 대출 허용 ⇒ 해외의 외국인투자자 지분 제한, 해외 신설법인의 부족한 담보력 등으로 그룹 계열사의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 확보 의무 폐지 ① 지분율과 무관하게 국내 계열사가 해외법인에게 무담보 영업자금 대출 가능 ② 영업기반을 확보한 기존 해외법인이 신설 해외법인에게 현지 통화로 영업 자금 대출 가능 <p>* 해외 권역별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가능</p>
② 금융지주회사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법인에게 직접 자금지원 (대출, 채권매입)만 가능 ⇒ 자금조달을 위한 외화채권 발행 등에 많은 비용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보증 허용 ① 지주사 신용으로 해외 진출국에서 현지통화를 쉽고 빠르게 조달 가능 ② 해외 법인의 국내 모회사가 자금지원이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활용가능

(11)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지원

□ (문제점) 금융지주는 금융업 또는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업종'에만 출자할 수 있어 금융·실물 융합업종은 해당여부가 불분명

- 특히, 핀테크 기업, 회사형 실물투자펀드*(리츠·선박 등)의 경우 금융지주의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 (개선) 자회사 편입가능 업종을 핀테크, 리츠 등 금융·실물 융합업종으로 넓혀 명확히 규정하여 신사업 진출 장애 제거

- (핀테크 기업) 유권해석('15.5.6 발표)에 그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한 핀테크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하여 투자활성화 유도

* PG, VAN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회사, 자료처리·중계전송 등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Big Data·금융모바일앱·인터넷뱅킹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

- (실물투자회사) 리츠, 선박투자회사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한 6개 투자목적회사(私募)에 투자할 수 있음을 명확화

< 자회사 편입이 허용되는 특수목적 투자회사 >

근거 법률	투자기구	투자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취득·관리·개발 처분 등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취득, 대선 등
해외자원개발법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집합투자회사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투자
지능형로봇개발법	로봇투자회사	로봇 관련 사업 투자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집합투자회사	위치정보 생산·관리 등 투자

⇒ (조치사항) 승 §2 개정

(12)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을 규제 폐지

□ (문제점) 회사형 공모펀드*는 투자기구이나 회사 형태로 설립 되기 때문에 일반 자회사와 동일한 주식보유(상장 30%, 비상장 50%) 규제를 적용받음

*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펀드

- 그러나, 펀드 특성상 잦은 청약·환매로 지분을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워 해외투자자를 위한 투자기구 운용 자체가 곤란

□ (개선)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한 투자 기구에 불과하므로 자회사등에서 제외(지분율 규제 면제)

⇒ (조치사항) 승 §2 개정

(13) 손자회사의 PEF 지배 허용

□ (문제점) 무분별한 수직적 지배방지를 위해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100% 취득 필요

- PEF는 그 성질상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손자회사가 국내 PEF를 설립할 수 없는 실정

* "지주-증권사(子)-자산운용사(孫子)"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PEF 설립 불가, PEF 설립이 불가능한 손자회사인 증권사-자산운용사는 11개사(4개 지주)

□ (개선) 손자회사가 PEF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 (현 행) 발행주식 총수 (LP지분까지 보유할 수 없어 PEF 투자 불가능)
(개정안) 의결권 주식 총수 (GP가 의결권 전부를 행사하므로 PEF 투자 가능)

⇒ (조치사항) 法 §26, §32 개정 (향후 법 개정사항과 함께 입법추진)

III. 향후 계획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추진 : 7~9월

※ 입법예고, 규제위 심사, 법제처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

□ 시행 : 10월 중

< 과제별 필요조치 사항 및 추진일정 >

내 용	조치사항
1. 영업 활성화	
①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② 자회사등간 직원겸직 허용범위 확대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③ 미등기 임원 겸직 허용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
④ 업무위탁·겸직 절차 간소화	시행령 개정
2. 정보 공유 및 활용 촉진	
⑤ 고객정보 공유절차 합리화	감독규정 개정
⑥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	시행령 개정
⑦ 빅데이터 전략적 활용 촉진	시행령 개정
3. 해외시장 진출 확대	
⑧ 자회사등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	감독규정 개정
⑨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	시행령 개정
⑩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폐지	시행령 개정
4. 신사업 진출확대 및 투자 다양화	
⑪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지원	시행령 개정
⑫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을 규제 폐지	시행령 개정
⑬ 손자회사의 PEF 지배 허용	금융지주법 개정*

* 법률 개정은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일괄 입법추진

참고

직원 겸직금지 업무 개선안 (잠정)

구 분	직원 겸직금지 업무	
	현 행	개선안
1. 예·적금수입	○ 예금·적금계약 체결	○ <u>예금·적금 등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 증서의 발행</u> ※ 수신기능 겸직차단
	○ 채무부담 증명행위 · 자기앞수표 발행,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등	
	○ 입금 및 지급 업무	
2. 대출	○ 대출의 심사 및 승인	○ <u>대출·채무보증 또는 어음 할인·인수의 심사 및 승인</u>
	○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업무(다만, 대출모집 업무 제외)	<삭 제>
3. 내·외국환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현행과 동일)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한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수령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비거주자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4.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	채무자에 대한 보증 또는 어음 인수의 결정(또는 승인행위)	<삭 제>
	채무보증을 위한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의 체결	
5.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과 어음관리계좌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삭 제>
	어음관리계좌 계약체결 및 해지	
	채무부담증명 행위 · 어음발행 등의 증명서 발급	
6.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업무	○ <u>자본시장법 시행령(제45)의 위탁금지* 업무를 준용</u> (현행 겸직금지 범위와 동일) * 투자자 보호 전전 거래절서 해할 우려로 위탁을 금지하는 업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 업무	
	증권의 인수업무	
7.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업무	

구 분	직원 겸직금지 업무	
	현 행	개선안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업무	
8. 집합투자업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업무와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설립업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 지시업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일부제외)	
9. 투자자문업	투자자문계약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 제공 업무 (일부제외)	
10. 투자일임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일부제외)	
11. 신탁업	신탁계약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 제외)의 보관·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 이하 동일)의 보관·관리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 포함)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의결권행사를 포함]	
12. 보험업	보험계약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현행과 동일)
	보험계약의 체결,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13.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 업무	신용계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삭 제>
	계급의 수입 및 추첨·입찰 등 업무	
	납부금의 지급업무	

구 분	직원 겸직금지 업무	
	현 행	개선안
14. 상호저축 은행의 신용부금업무	신용부금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부금의 수입업무	
	급부금의 지급업무	
15. 신용카드업	회원자격 심사, 이용한도 부여 및 발급승인	(현행과 동일)
	가맹점 계약의 체결	
	거래 승인	
	신용카드 회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업무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모집하는 경우 가능)	<삭 제>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16. 시설대여업 및 연불판매업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심사 및 승인	(현행과 동일)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계약체결	<삭 제>
17. 할부금융업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심사 및 할부금융 한도설정의 승인	(현행과 동일)
	할부금융이용자와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삭 제>
	매도인과의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삭 제>
18. 신기술사업	신기술투자조합설립 및 자금의 관리·운용	(현행과 동일)